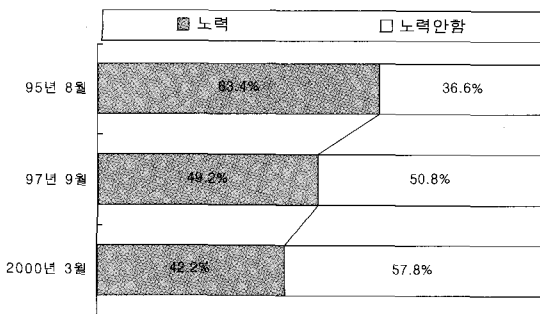


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12)

자료제공 환경부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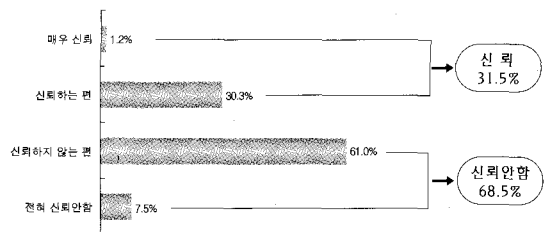
-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50.0%), 광주/전라(56.3%), 부정 평가는 서울(65.1%), 부산/경남(6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냄.
- 지난 '95년 8월 실시된 「월드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3.4%,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시에는 긍정 평가가 49.2%로 나타나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정부 발표 환경오염관련 지표에 대한 신뢰도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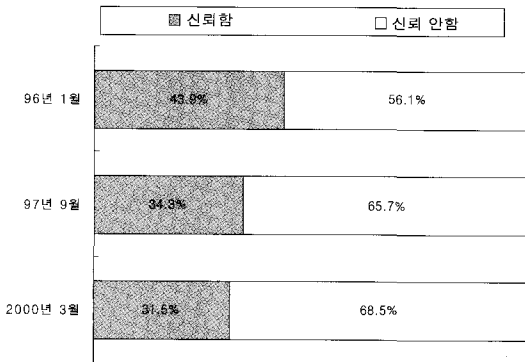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31.5%(매우 신뢰 1.2%, 대체로 신뢰 30.3%)로 나타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68.5%(전혀 신뢰 안함 7.5%, 별로 신뢰 안함 61.0%)로 조사되어, 긍정적 시각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향후 정부 발표 지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공·공동연구 등 적극적인 제고 노력이 요망됨.
- 정부발표 환경관련 지표를 '신뢰한다'는 평가는 대구/경북(36.8%), 광주/전라(52.5%), 대전/충청(43.0%) 거주자, 권역별로 군지역(38.8%)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서울(76.2%), 부산/경남(75.6%), 인천/경기(74.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Base=1,500 >

결과분석

- 정부 발표 환경오염 관련 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과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96년 1월 「한국환경기술개발원과 중앙일보」 공동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는 43.9%,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나타남. 또한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34.3%, 부정 평가 65.7%로 나타나 96년 이후 정부 발표 환경오염 관련 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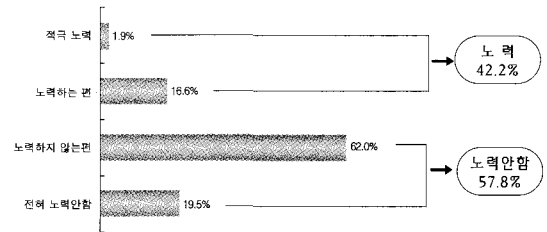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 평가

결과분석

-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18.5%(매우 노력 1.9%, 대체로 노력 16.6%)에 불과한 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81.5%(전혀 노력 안함 19.5%, 별로 노력 안함 62.0%)로 조사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부정적 시각이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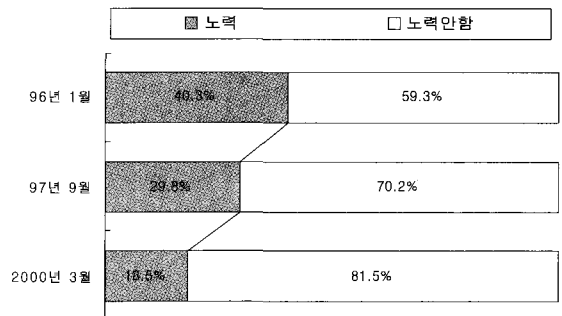
-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서울(89.5%), 부산/경남(89.0%), 강원(88.7%)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권역별로 대도시(85.4%) 거주자,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84.8%), 학생(84.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Base=1,500 >

결과분석

- 지난 '96년 1월 실시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과 중앙일보」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59.3%로 나타났으며,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에서는 부정 평가가 70.2%로 증가해, 이번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본 결과,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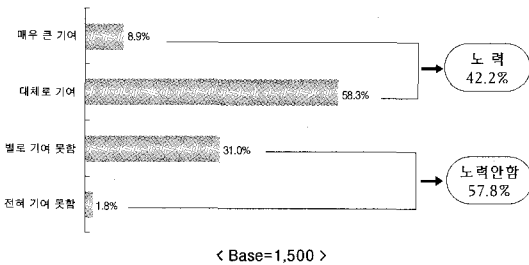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기여도

결과분석

- 현재 우리나라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67.2%)의 응답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매우 기여 8.9%, 대체로 기여 58.3%)를 나타냈고,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8%(전혀 기여 못함 1.8%, 별로 기여 못함 31.0%)로 조사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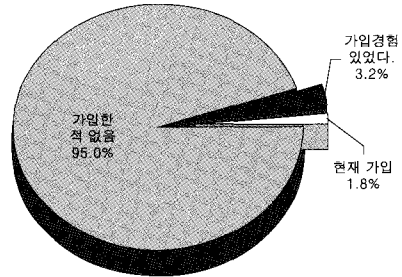
-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83.1%) 거주자, 권역별로 군지역(8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환경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여부

결과분석

- 환경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1.8%, '과거 가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5.0%로 조사되어,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모임에서의 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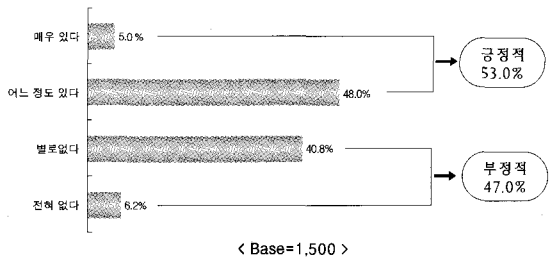


5.1. 환경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의향

결과분석

- 환경 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경험이 전혀 없는 1,473명을 대상으로 향후 환경 관련 모임에의 가입 기회시 가입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3.0%,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7.0%로 각각 나타나, 두 가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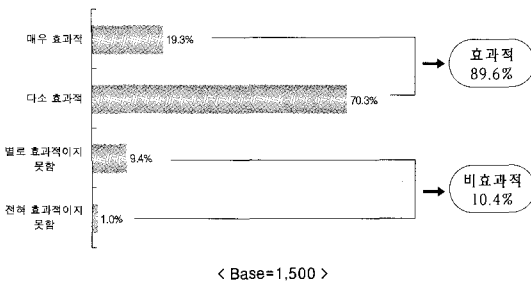
- 향후 환경 관련 모임에 대한 가입 의향은 연령별로 30대(59.2%), 40대(60.2%), 지역별로 서울(58.1%), 인천/경기(56.6%), 강원(62.3%) 거주자,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55.3%), 자영업(58.6%)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환경부와 종교단체간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의 효과성

결과분석

- 환경부의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89.6%)의 응답자들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매우 효과적 19.3%, 다소 효과적 70.3%)을 나타낸 반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10.4%(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 1.0%,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와 종교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에의 긍정적 시각과 함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효율적인 환경보전 활동 전개를 위한 종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 및 협력 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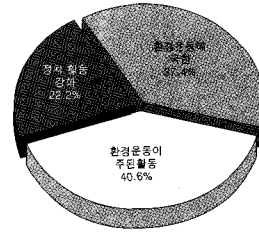
7.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시민운동 참여에 대한 의견

결과분석

- 일부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시민운동 참여에 대해 정치적인 운동도 불가피하지만 '환경운동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한다' (40.6%)는 의견과 '순수한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37.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활동이 주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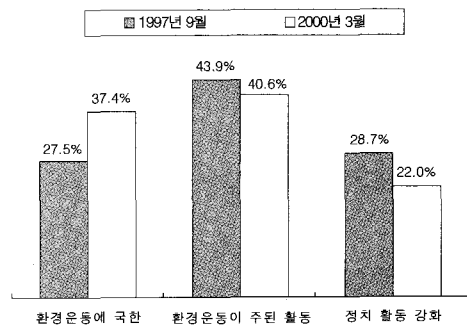
(45.7%), 서울(47.6%), 광주/전라(44.8%) 거주자, 학생(5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한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42.4%), 인천/경기(42.8%), 대전/충청(43.0%), 강원(41.5%) 거주자, 자영업(46.7%)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분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Base=1,500 >

결과분석

- 지난 97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와 비교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7.5%에서 3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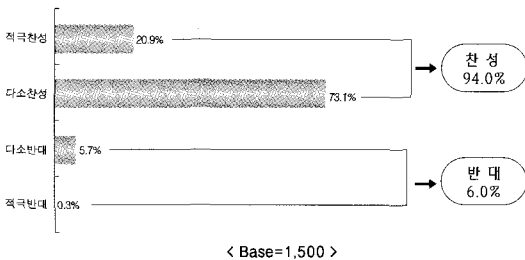
PART VIII. 지구환경문제 대응방안

1.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에 대응한 국내 환경규제 추진 방향

결과분석

□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면, 일반국민의 대다수(94.0%)가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적극 찬성 20.9%, 다소 찬성 73.1%)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나타냄. 반면 국내 환경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0%(적극 반대 0.3%, 다소 반대 5.7%)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對外 경쟁력을 우선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의 환경무기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보다 철저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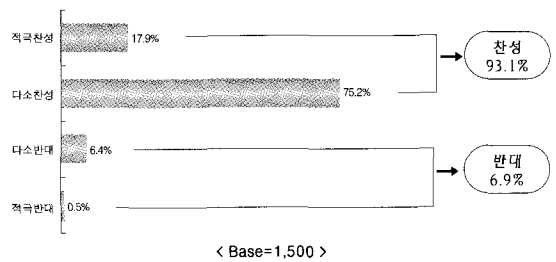
2.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찬반의견

결과분석

□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참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93.1%)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적극 찬성 17.9%, 다소찬성 75.2%)을 나타냄. 반면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6.9%(적극 반대 0.5%, 다소 반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는 의견은 6.9%(적극 반대 0.5%, 다소 반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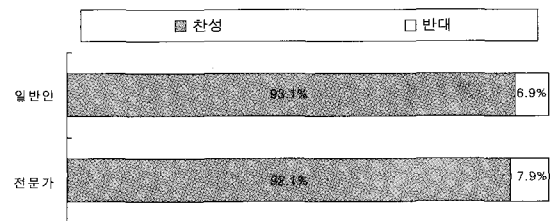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과분석

□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참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환경전문가 대다수(92.1%)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적극 찬성 42.7%, 다소찬성 49.4%)을 나타냄. 반면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7.9%(적극 반대 1.8%, 다소 반대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환경전문가 역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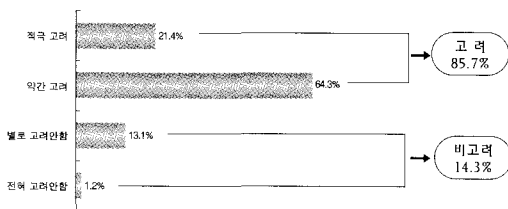


PART IX. 환경과 주민 행사 및 개선과제

1. 선거의 지지후보 선택시 후보의 환경정책의지 고려 정도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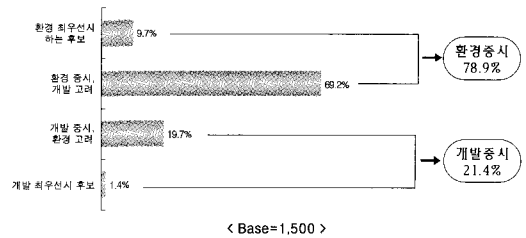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출마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意志)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85.7%(적극 고려 21.4%, 약간 고려 64.3%)로 나타난 반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의견은 14.3%(전혀 고려안함 1.2%, 별로 고려안함 1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선거시 ‘출마후보의 환경정책 의지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은 대구/경북(88.5%), 광주/전라(91.3%) 거주자, 화이트 칼라(89.6%),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는 일반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환경의식과 관련된 적합한 후보자 像

결과분석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환경의식과 관련하여 적합한 후보자 像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를 지정한 의견이 1순위(69.2%)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개발을 중시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후보’(19.7%),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보’(9.7%),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보’(1.4%) 순으로 나타남.
- 선거시 적합한 후보 像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를 지정한 의견은 30대(72.8%), 부산/경남(74.4%) 거주자, 화이트 칼라(72.7%), 주부(72.1%) 학생(71.1%)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환경이나 개발의 한쪽만을 주장하는 후보보다 ‘환경 마인드를 중심으로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음호에 계속...